

미래 농업 · 농촌 위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우리의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WTO가 추구하는 소위 세계화 개방화의 논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선진국 위주인지를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알아야 하고, 농업 농촌을 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의 나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50여년이 지난 지금, 평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양적성장을 가져왔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농업은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민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상대적 빈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는 한국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이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고민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알팍한 정책대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업농 육성이나 수출농업, 벤처농업, 기능성 농업 육성 등은 근본적인 우리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의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가장 시급한 일일까. 그것은 최근에 세계화 개방화 시대가 추구하는 경쟁력 지상주의와 물신주의에 저항하여 새로운 운동들이 꿈틀되고 있는바 다름 아닌 농업문명의 회복운동이다. 즉, 로컬푸드 운동, 도시농업운동, 학교급식운동,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귀농·귀촌, 생협운동의 활성화, 착한소비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슬로우푸드·슬로우 시티 운동, 공정무역,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 등이 그것이다.

미래의 한국 농업·농촌이 살아남는 길은 이러한 농업문명의 회복운동이 점차 확대되어 인간과 농업과 자연과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내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의 철학과 비전의 설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알아보자.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제인식 전환

첫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이다. 농업·농촌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농업인들의 노력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식량안보, 식량주권, 국민건강권)이 농업인만의 문제일 수 없고,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유지(국토의 효율적 이용)가 또한 농업인만의 문제일 수 없으며, 자연과 환경 생태 그리고 전통·문화 보전(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재해방지기능)이 농업인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WTO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농업·농촌·농업인 문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지상주의 정책의 팽배는 농업부문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WTO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불평등의 근경'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구 20%가 지구상의 부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80%의 국내총생산을 선진국 10억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20%를 후진국 50억명이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이 낳은 이런 불

평등은 국가와 국가 사이는 물론 한 국가의 내부에서도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후진국의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잘사는 나라는 점점 잘살게 되고 못사는 나라는 점점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WTO 체제는 시장지향의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식량문제는 물론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크(Tony Clark, 폴라리스 연구소 의장)는 'WTO가 민족국가의 인민 주권으로부터 전 지구적 다국적기업의 인민주권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확장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하였고 코어(Martin Khor, 제3세계 네트워크 대표)는 'WTO가 남반구의 후진개발도상국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미 수년 전에 설파한바 있다. 그러한 예측들이 하나 하나 들어 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기아인구는 10억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억명 이상의 인류가 영양결핍 상황에 빠져 있다.

결국 WTO 체제는 국내적으로도 소위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

어 이 부문 종사자의 소득은 하락하게 된다.

즉 농업은 그 중요성이나 공익적 가치가 کم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을 들이 댔을 경우에는 타산업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WTO 체제는 경쟁력만을 강조함으로써 농업이라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농업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투자에 의해 유지되는데 반해 그럴 재정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대부분 후진국의 농업·농촌은 해체적 위기상황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공동체의 위기의식으로 연결되고 식량안보는 물론 식량주권의 확보마저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국토와 환경의 황폐화가 우려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미국·캐나다·EU 등 식량수출국들은 자국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시장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오도된 세계화'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도층 올바른 인식·선진국 이증성 이에 필요

셋째, 특히 정부·국회·언론 등 우리사회

미래 농업·농촌 위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지도층의 농업·농촌·농민 문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지도층의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넷째, WTO와 선진국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요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식량수출국들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시장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오도된 세계화'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문명 회복·교육 홍보 필요

다섯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과 반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쟁력 지상주의와 물질주의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 보편적 가치의 혼돈과 인간소외의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는 결국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지나 토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농식품 안전은 인류 전체의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

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문명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컨대 로컬푸드운동, 도시농업운동, 학교급식운동,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귀농·귀촌, 생협운동의 활성화, 지역공동체 운동,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운동, 공정무역,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가야할 길이며, 우리의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이다.

여섯째, 우리사회 지도자 그룹과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한국농업 회생을 위한 교육대상은 농업인이 아니라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그룹이다. 행정관료, 국회의원, 언론인, 지식인, 기업인, 지역리더(시장 군수 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자연, 농토, 생태, 자원 등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의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WTO가 추구하는 소위 세계화 개방화의 논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선진국 위주인지를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알아야 하고, 농업 농촌을 보는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의 나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Y